

해양경계획정 과정에서 형평원칙이 고려해야 할 법률제도 관련사정

- 텡루이(滕蕊), 리드어(李德)¹⁾

개요 : 오랜 기간 해양경계획정 과정에서 형평원칙과 등거리/특수사정 원칙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해왔다. 국제해양법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해양경계획정에서 형평원칙은 법률 원칙이고 등거리/특수상황, 중간선, 비례 등은 규칙이나 획정 방법이라 불려 왔다. 이런 원칙과 방식을 사용하는 최종 목적은 형평을 실현하려 하는 것으로 중국도 일관되게 해양경계획정에 형평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와의 경계획정에서 구체적인 규칙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어떤 규칙을 채택하더라도 실질적인 ‘불공평’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은 현재 해양법에서 가장 분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동시에 중국의 해양 이권과도 매우 큰 관련이 있다. 각국이 해양 경계획정에서 고수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방법이 모두 달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일관되게 형평원칙을 주장해 왔지만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등거리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형평 원칙은 어떤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한 경향이 있었다.

1. 지리·지질 요소

국제법과 중재판례는 지리 지형적 요소가 경계획정 과정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우선원칙’, ‘우선기준’, ‘불변의 사실’ 이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로 해양경계획정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컸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을 해왔다.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해저의 지형이다. 해저 지형은 지리와 지질 요인 중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는 해안선 비율이다. 비례는 해당 국가의 인접 경계 해역의 해당 해안선 길이와 해당 국가가 경계선을 긋는 방법으로 얻은 해당 해역과의 관계를 말한다. 세 번째는 해안의 모양이다. 해안선도 해양경계획정에서 중요한 지리적 요소다.

1) 해군항공공정대학(海军航空工程学院)

2. 도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섬/도서’는 경계획정 일방의 우연적인 지리 상황에 의해 나타난 섬을 말하며 그 자체가 독립된 개체로 경계획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해양경계획정 과정에서 섬 자체가 독립된 개체가 되려면 1992년 캐나다-프랑스 판례에서 프랑스 섬인 생피에르에미클롱처럼 경계획정의 관련사정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계획정의 일방에 속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다. 어떤 상황에서 섬이 어떤 관련 사정으로 간주되고 어떤 해양 경계가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통일된 기준은 없다. 일반적으로 섬은 우선 경계획정의 기점이 되는 완전한 효력을 가진 섬, 부분 효력을 가진 섬, 반효력을 가진 섬과 비지(A국 경내에 있으면서 B국에 예속된 영토)섬으로서 어느 정도의 해역이 인정되는 섬, 경계획정 과정에서 효력이 없는 섬이 있다.

3. 자원

자원은 경계획정 문제의 직접적인 핵심이 된다. 우선 관련 국가의 자원개발은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촉진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두 번째로 관련해역의 자원개발과 관리배분은 경계획정 과정에서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1969년 북해 대륙붕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광물자원의 통일성은 경계획정 협상에서 합리적으로 고려되는 제1의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²⁾. 오래전부터 가스, 광물자원은 해양경계획정의 주요 고려 대상이었다. 이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립되면서 해양 내 생물자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새로운 고려 요소가 되었다.

4. 기타 요소

필자는 국제법이나 중재안을 통해 당사국의 행위, 제3국의 이익, 경제적 요인, 당사국 육지의 면적, 역사적 권리, 안보적 요인 등 많은 요인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관련 사정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별해 보도록 할 것이다.

첫 번째 살펴볼 요소는 당사국의 행위이다. 1982년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경계획정안에서 당사국의 행위는 경계획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관련 사정이었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두 당사국이 1974년 이전에 석유조차지(租借地)의 지위를 부여한 것을 고려하였다. 두 번째는 제3국의 이익이다. 1969년 북해 대륙붕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동일한 지역의 인접국가간에 새로운 대륙붕 경계획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상황이나 영향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³⁾. 세 번째는 경제적 요소이다. 기존 해양경계획정 사례에서는 경제적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130개의 해양경계협정을 연구 중 36개의 협정이 경제와 환경적 요소를 경계획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선택하였다⁴⁾.

2) 북해 대륙붕 판결, 제 97 단락.

3) 북해 대륙붕 판결 제 101단락

네 번째는 당사국의 육지 면적이다. 지금까지 국제사법재판소와 중재안은 리비아-몰타 대륙붕, 기니-기니비사우의 해양경계안획정 등에서 '당사국 육지 면적의 크기'가 해양경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는 역사적 권리이다. 튀니지와 리비아 경계획정, 메인만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역사적 권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관련 요소로 보지 않았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요소들이 각국의 근본적인 이익과 맞닿아 있어 해양경계획정 원칙의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평한 결과라는 핵심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일체의 관련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경계획정을 완성하는 것이 현재의 최우선 과제이다. 따라서 중국은 해양경계획정을 할 때 형평 원칙을 시종일관 유지하며 협상, 자연적 연장, 비례 원칙 등을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중국의 해양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4) 위안구지에(袁古洁). 국제해양경계획정의 이론 및 실천 [M]. . 북경: 법률출판사, 2011.